

“명실상부 국익 특별법” vs “비준동의 필요·국민경제 부담”

〈민주당〉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與 “완벽한 법안으로 통과 기대
시한 없이 꼼꼼하게 심의 진행”

野, 막대한 정부 재정 투입 예상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 입장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을 두고 여야가 국익에 저해되는 일이 없이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1일자로 소급적용되는 요건을 갖췄다.

허 원내수석은 의안과 법안 제출 후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대변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기자들과 만나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 여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경우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담당 상임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의원이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던 지적에 대해서 “기재위원장(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 의사나 ‘안하겠다’ 이런 의사를 한 번

도 표명한 적 없다”며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이어질 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하느냐 물음엔 “패스트트랙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이다. 속도도 중요하다”면서 “그렇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이 전략산업 중심국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부인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게 돼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 여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양해각서)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점이 있으면 국내법, 특별법, 법 개정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 처리만 말해서 문제라고 당이 주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영 원내수석은 전날(25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대통령, 정상회담 후속조치·청와대 이전 주력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무리

4개국서 주요 분야 협력강화
원·달러 환율 등 국내현안 산적
내달부터 청와대 이전 시작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서울 공항으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다음달로 예정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인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번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남아프리카



G20 정상회의 등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경기 성남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카공화국·튀르키예 4개국을 순방하며 각국과 원전·방산·인공지능(AI)·바이오·인프라 등 주요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028년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아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숨가쁜 다자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양자회담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UAE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AI·방산·원전·에너지·K-컬처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세밀화하는 데 주력했고, 특히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200억달러(30조 원) 규모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UAE와 방위산업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부 측의 실무 협상 작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하며, 이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정보·경험·노하우·지식 지식공유와 전문인력의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립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고 밝혀 추후 한국 측의 참여가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

로공사·한국해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자간 튀르키예·한국·제3국에서 민관 협력개발사업(PPP)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현안도 만만치 않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눈 앞에 둘 만큼 급등해 국내 경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당국은 환율 급등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 공단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며 국민의 노후 자금이 환율 안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사업이었던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이 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3년 →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임금체불 예방활동 강화도

당정이 26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당국 합동감독 및 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당정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체감도 높은 5개 정책 ▲임금체불 근절 ▲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도입 ▲취업사기 근절 ▲청년일자리 해소 ▲근로감독관 인력·역량 강화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년연장 입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교원·공무원 정치기부금 보장’ 등 연내 입법 처리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외에도 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공공발주 건설공사 외 민간발주 공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제도는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적용 확대 시 적용 분야·업종 등은 추후 고려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자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협업 및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1차 관리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野, 불법계엄 두고 “사과하면 믿어주겠다”

비상계엄 1주년… 사과 표명 두고
‘내부분열 vs 반성 필요’ 의견 갈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당 지도부의 사과 표명 여부와 수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강경파 당 지도부는 반복된 사과는 내부 분열을 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내 일부 초선 의원은 지도부의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1주년인 다음달 3일이 장동혁 당 대표 취임 100일과 겹치기 때문에 기자회견 등 언론과 소통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사과 메시지를 낼 지

고심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민심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방선거에서 당 내부 위기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이 반복된 사과보다 과거를 모두 끌어안고 지지자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무슨 날짜가 됐다고 사과를 하고,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을 전부 출당하고 탈당시키면서 우리와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어주겠다”라며 “우리당의 역사이자 공과 과인데, 오히려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책임 정치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